# 역구독경제와 지방소멸 대책

(Reverse Subscription Economy)



조덕호 대구대학교 교수



'구독' '좋아요,' '역구독' '더 좋아요'

요즘 '구독' '좋아요'가 대세이며 각종 인터넷사 이트, 유튜브, 넷플릭스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 용할 때는 일정한 구독료를 지급해야 한다. 물건 혹은 정보의 사용 가치에 대한 대기를 지급해야 가 된다. 하는 구독경제(subscription economy)가 배타 적으로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경제(market econ omy)와 재화나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 제(sharing economy)를 넘어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.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도 개인의 '데이 터 주권(data sovereignty)'이 보장되지 않는다.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,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. 정부는 소 득, 금융거래, 의료정보 등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신고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.

또한, 이사를 하거나 신생아가 탄생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. 이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 인의 정보 주권을 보호하기는커녕 행정편의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요 구하고 있다. 기업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때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, 이에

대해서 어떤 대가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며,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.

개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정보가 기업이나 정 부혹은 다른 기관에서 구독되고 있는 셈이다. 그 렇지만 어느 기관도 개인정보에 대해 구독료를 지 급하지 않고,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. 정보 활용 기관은 개인에게 구독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 를 정보제공자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정보를 사 용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구독료를 받는 이른바 '역구독경제(reverse subscription economy)'

이것이 제4차산업 사회의 원유인 개인정보(da ta)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이며, 그렇게 해야만 진 정한 의미에서 주권 재민의 사회가 되고,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보호된다. 이처럼 정보 사용기관 으로부터 개인정보 사용 대가를 받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,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.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'데 이터 주권'의 실현을 통한 '주권 재민'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역구독 경제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.

특히 지방소멸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최근 들어 귀농, 귀촌 정책, 영농 지원 등 지방자 치단체별로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, 효 과가 있기는커녕 지방쇠퇴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.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농산어촌 지역에 는 많은 농지와 주택이 주인을 잃은 채 방치되고 있어 페농지와 빈집이 속출하고 있고 젊은이와 어

린이는 거의 없고 노인들만 사는 희망소멸 지역으 심지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자주 사회적으로 로 전략하고 있다. 반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은 인구의 집중으로 주택문제, 교통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, 수요 공급의 원리 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수 도권 블랙홀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.

>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구독경제 의 개념을 지방소멸지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 까? 농촌의 빈집과 폐농지를 도시 청년들이 구독 할 경우 필요한 주택과 농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 론, 매월 일정한 역구독료을 지급 받는 이른바 '역 구독경제'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. 그렇게 되 면 농촌 지역으로 회귀하는 젊은이는 구독하는 주 택과 농지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주하면서 농사 를 지을 수 있고, 영농소득과 지금 받는 역구독료 을 합하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됨으로 도시에서 주 택, 소득, 직업 문제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풍요 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.

> 또한, 디지털 대전환으로 신 유목민(new nom ad)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온라인 재택근무가 점 차 보편화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의 직장에도 다닐 수 있는 2 직장과 2주택 정책(two jobs and two housings policy)을 펼 수 있으며 도시에 3일, 농촌에 4일 거주하는 이른바 도3농4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정책은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을 양분하는 정책 에서 벗어나서 대도시와 농산어촌, 수도권과 지 방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 회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국 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 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.

#### 사 설

### 윤핵관, 尹 정부 성공보다 당권이 먼저인가

윤핵관들의 내부 권력투쟁이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. 국민의힘이 어렵게 정 권교체를 이루고도 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 이 국정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지 지도를 갉아먹고 있다. 지금은 나라 사정이 안 팎으로 어려움에 당면해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도 헤쳐나가기가 힘든 상황이다. 윤핵관 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대표적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 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장제원 의원 간의 힘겨루기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 다. 차기 당권을잡아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겠다는 권성동 권한대행과 안철수 의 원을 앞세워 차기 당권을 노리는 장제원 의원 간의 물밑 경쟁이다. 두 윤핵관은 불화설을 잠 재우기 위해 오찬까지 하며 단합을 과시했지 만청와대 '9급채용' 문제를 놓고 3일 만에 다 시 불화 조짐을 보였다.

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0%대 초 반까지 떨어지고 있다. 말 그대로 날개 없는 추락이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'내각제라면 정권을 내놓아야할 판'이라고 했고 더불어민 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. 취임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을 두고 탄핵 등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.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국 정 동력 상실과 함께 정책 효과를 마비시키기 는 결과를 가져온다.

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 을겪고있다. 천정부지로 오르기만하는 소비 자물가, 끝없이 터져 나오는 인사 구설수, 어 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노조의 불법 시 위, 기득권 개혁 지체 등으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이다.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의 '광우 병파동'처럼 집권 초기의 국정에 흠집을 내려 는 보이지 않는 악의적 세력까지 의심되고 있 다. 윤핵관들이 당권 싸움에만 빠져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.

다음 총선은 국정 심판이 될 가능성이 크 다. 그런데도 여당이 권력 싸움만 벌인다면 총 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. 정권 성공이나 총선 승리, 모두가 안 되는 수가 있다. 특히 여 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·노동·연금개혁 을 추진하고 전 정부 비리를 척결하려면 국민 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. 여기에 윤핵관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.

#### 코로나19 재확산, 백신 4차 접종만으로 될 일인가

코로나19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. 질병관리 청은 1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(코로나19) 신규 확진자가 7만3천58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. 지난 4월27일 7만6천76 5명 이후 83일만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다.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천886만1천593명이 됐다. 7만 명 돌파와 더불어, 1주 단위로 확진 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'더블링' 현상도 3주 째 지속되고 있다. 다음 달 중순이면 하루에 최대 20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 을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

하다.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이 가장 빠르다는 '켄타우로스'라는 별칭을 가진 'BA.2.75변이'에 감염된 확진자 가 한국에서도 확인돼 하반기 재유행 확산세 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 특 타나 방역당국은 이미 국내 지역사회에 켄타 있다. 새로 확인된 켄타우로스는 현재 재유행 을이끌고있는BA.5보다백신이나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더 잘 피한다고 알려졌는가 하 면 확산 속도가 BA.5의 3배가 넘는다고 한

다. 자칫 코로나 대유행 초기와 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도 방역당국 에 긴장감을 찾아보기 힘들다.

오늘(18일)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 접 종 대상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된다. 기존 6 0대 이상 대상자에 50대, 18세 이상 기저질환 자, 장애인·노숙인 생활시설 입소·종사자가 새롭게 추가됐다. 예약을 통한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. 정부는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. 하지만 근래 마스크를 쓰지 않 는 사람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. 더구나 현재 국내 우세종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'BA. 5' 바이러스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은 효과 가 낮다고 한다.

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감염 후 완 치된 이들도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백 신접종만 권고해서 될 일인가. 지금의 코로나 히 그는 최근 해외여행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 19 재유행은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사회전반 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우로스 변이가 상당히 퍼져있을 것으로 보고 다. 부작용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4차 백신 을 접종하려는 이가 적은 것도 걱정이다. 힘들 지만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착 용 거리두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방역당국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.

## 대구시, 전국 최초 민·관·공 공동활용 화상 협업 플랫폼 구축

# ▼ 미디어 포커스

화상회의 중 투표·설문 등 동시 진행 회의 후 음성자동받아쓰기로 기록 시험운영 거쳐 오는 9월 본격 운영

대구시는 시민과 공공이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화상 협업 플랫폼 '소통이음'(talkeu m.daegu.go.kr)을 구축 완료하고, 19일 화상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.

대구시가 개발한 '소통이음'은 △지역현안을 무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. 이해당사자와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'문자 소통' △영상으로 소통하는 '화상소통' △화상회

의나 오프라인에서 발굴된 협업의제를 등록하고 협업참여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찾아 협업을 요 청하면 요청받은 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함께 실 현해가는 '협업소통'으로 구축돼 있다.

기존 화상시스템과 달리 PC뿐만 아니라 모바 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, 지역현안을 발굴·해결 하고자 공동체 활동을 하는 시민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, 회의참여를 알리는 문자발송 기능 과 대구시가 자체 제작한 이모티콘을 탑재해 제 공하고 있다.

화상회의 중에 투표나 설문, 우수사례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회의가 끝나면 음성이 자 동으로 문서화 돼 회의 개설자는 회의내용을 한글 로확인할 수 있어 회의를 직접 기록해야 하는 업

소통이음 구축사업은 작년 6월에 행안부 협업 특교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지

원받아 개발에 착수하게 됐으며, 대구시 주관 '상 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'에서 창의성, 확장 가능성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.

대구시는 8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 상 운영할 계획이다.

권오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"이제는 복잡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 다"며, "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디지털 대전 환 시대에 걸맞게 소통이음이 시민과 공공 간 비 대면 소통창구로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김종현기자 opIm@idaegu.co.kr

※ 오피니언 면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